

쟁점 떠오른 검수완박법...정준호 의원 사건 항방은?

정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기각...검, 항소 대신 재기소기로 '내란 혐의' 기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도 유사 주장 '주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측이 이 법을 내세워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중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정 의원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항소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광주지검은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정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광주지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광주지방법원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지검 소속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 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검찰청법 4조 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검사가 수사 기소의 수사와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시간인 선고 1주일이 지나지만 항소 대신 재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이 재기소를 하더라도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존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없어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첫번째는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

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소제기가 위반

한 경우는 시효가 정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개인 페이스북에 "항소기한이 만료됐지만, 검찰은 단순 절차규정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시시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강행하는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없는 최초 케이스라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다루어 보겠다"면서 "검찰이 즉각적인 재기소의 입장이라면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기소 여부 검토 및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담당하던 서울지검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검사가 공소 검사를 겸하며 수사 범위의 수사를 자행한 불법으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 담그기 배우자 전통 장 담그기 행사가 22일 광주시 남구 압촌동 공중합성센터에서 열렸다. 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명인으로부터 장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 촉구 집회

27일 전남대 5·18 광장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리는데 이어 5·18민주화운동 시발점인 전남대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열린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주장에 동조하는 성격의 집회로 해석돼 주최측이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대생의 커뮤니티 앱 '전남대 에브리타임'에는 27일 오후 5시 전남대 5·18 광장에서 '전남

대 부정선거 조사촉구 시국선언'을 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남대 5·18 광장은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했던 학생들이 시국집회를 연 상징적인 공간이다. 시국선언 주최는 '부정선거 조사를 촉구하는 전남대인'으로 지난 18일 경북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서 참가자들이 전남대·전북대의 동참을 호소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 참여호소문에는 학과 점퍼를 입고 학생증을 지참하고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 첨부돼 있다. 앱 관리자는 해당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글을

삭제했지만, 다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댓글에는 부정선거 시국선언을 응원하는 일부 글도 있지만, "40년전 목숨바치며 민주화를 외친 결과가 고작 이런것?", "탄핵 반대 인원으로 보이는데 참석자 몇 명 안될 것", "땀땀하면 마스크 쓰지 말고 집회에 참석하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올라왔다. 광주대 일부 대학생들도 같은 날 일부 전남대생들과 연대해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 이들은 광주대 탄핵반대 시국선언 촉구문을 통해 '좌파우파의 싸움이 아닌 진실과 거짓, 공정과 불공정,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체제전쟁'이라고 주장했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학동 참사' 하도급 업체 항소심 감형

현산 관계자 3명은 집유 유지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이 감형을 받았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 관계자 3명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1심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백술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1심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여·6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징역유예 3년(1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1심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백술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1심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여·6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징역유예 3년(1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61)씨, 공무부장 노모(57)씨,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 소장 김모(53)씨 등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원심이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산업개발 법인과 한솔기업, 백술기업의 벌금형도 유지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사고 방지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를 유발, 인

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정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작업자가 해체 계획서 상의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서 건물 안쪽에 높이 11m가 넘는 거대한 흙더미를 쌓았고, 기계가 닿는 대로 해체하다 1층 바닥이 붕괴해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설업체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한솔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를 50여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불법하도급 업체 백술에게 공사를 11억원에 하도급했고, 이 금액은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다"고 지적했다.

학동유가족은 항소심 이후 성명서를 통해 "항소심 판결도 공사를 총괄한 원청의 불법 재하도급과 현장의 부실한 관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참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제대로 된 건설기업의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새 출발의 각오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에 적극적인 추모 사업 지원과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인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